



## 지방직 7급 행정학

### 1. 총평

지방직 7급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제도의 개편이후 첫 시험이니 만큼 낯선 시험제도하에서 시험준비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다들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견뎌내며 차분하게 준비했던 수험생에게는 합격에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견뎌온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보상이 주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지방직 7급 행정학 시험문제의 특징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문항별 난이도와는 별개로 시간적 압박속에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수험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간 점수의 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학 합격 점수는 95점 이상이면 훌륭하고, 90점 이상이면 합격선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항별 해설은 아래에 문서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쉽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에게 합격의 여부를 떠나 “수고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2.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3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4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3	지방자치론	2

###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1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짚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2	3	4	-	2	4

| 개념 |

0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가치는?

- ① 민주성
- ② 형평성
- ③ 능률성
- ④ 대응성

**【해설】** ③ [O]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자본주의 정신, 기계적 능률 등이 강조되던 산업화 단계 사회에서 조직의 능률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고전적 조직이론이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358~361

▶ ③

02 다음은 콕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의제 설정과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나)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다)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         | (가) | (나)   | (다)   |
|---------|-----|-------|-------|
| ① 동원형   |     | 외부주도형 | 내부접근형 |
| ② 내부접근형 |     | 동원형   | 외부주도형 |
| ③ 외부주도형 |     | 내부접근형 | 동원형   |
| ④ 내부접근형 |     | 외부주도형 | 동원형   |

【해설】 ④ [O] (가) : 내부접근형, (나) : 외부주도형, (다) : 동원형

(가) **내부접근형에 대한 설명이다.**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부접근형은 동원형처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지만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이 생략**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나)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이다.**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의 주도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으로, 정부 밖에 있는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고 그것이 확산되어 공중의제로 전환되고 결국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다) **동원형에 대한 설명이다.** 동원형은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부의제화를 만드는 경우로, 주로 정치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지만, 일방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가 진행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218~219

▶ ④

### 03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 ②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 ③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 ④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해설】** ① [X] 실적주의는 엽관주의(대표관료제 X)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엽관주의의 부작용으로 공직의 거래와 행정의 비전문성·비능률성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혁운동이 실적주의의 수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O]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③ [O]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적주의의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④ [O]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464~466



## 0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해설】**

- ① [O]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영역)별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큰 기능에는 몇 개 부처 예산이 동시에 포함되어 어느 부처의 예산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기관별 예산흐름의 파악이나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 ② [X] **조직별 분류**는 예산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정부의 조직단위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예산지출의 목적 및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③ [O] 기능별 분류는 일반국민들이 정부예산을 통해 정부활동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예산정보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한다.
- ④ [O] 품목별 분류는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통제지향적 분류방법으로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 ▶ 올바른 지문

-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649~651

▶ ②

05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결정에서 가치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 ②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전제조건이다.
- ③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통합을 모색한다.
- ④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설】** ④ [O]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고,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대안 선택을 추구하는 결정 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 기여, 쇄신적 정책결정,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한 경제인 등 가정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① [X]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② [X]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X]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259~269

▶ ④

0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 【해설】**
- ① [X]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경쟁적 규제 정책(보호적 규제 정책 X)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O]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원칙은 허용하고, 예외는 금지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 ③ [O]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 ④ [O]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 올바른 지문

-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경쟁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ummary | 정책의 유형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배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 정책내용이 소규모 단위로 구분가능 ex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사회간접자본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 계급 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필요 ex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사회보장제도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됨.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ex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등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ex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발생 /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ex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공직자의 보수 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ex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등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ex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 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등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32, 33, 39, 195





07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해설】**
- ① **[O]**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현상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다만,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주체적 역할을 간과한다(행정의 독자성을 과소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취급)는 한계가 있다.
  - ② **[O]**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 있는 연구를 강조하고, 연구결과의 실천(action)을 중요시한다. 또한,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보다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 ③ **[X]** 공공선택이론은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 ④ **[O]**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형성된 제도는 지속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갖고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게 된다.

▶ 올바른 지문

- ③ 공공선택이론은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132, 134, 135, 140, 149



08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 ②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사전계획, 예정표
- ③ 연속형 기술(long - linked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 ④ 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 -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 규칙, 표준화

- 【해설】**
- ① **[×]**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은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을 갖고 부정기적 회의,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예정표 등의 조정 형태가 나타난다.
  - ② **[×]**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은 페로우(Perrow)의 기술 유형에 해당한다.
  - ③ **[×]** 연속형 기술(long - linked technology)은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을 갖고,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계획 등의 조정 형태가 나타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부정기적 회의,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예정표
- ③ 연속형 기술(long - linked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계획

summary | 톰슨(Thompson)의 기술분류와 조직구조

기술	상호의존성	의사전달의 빈도	조정형태
중개적 기술	집합적 상호의존성	낮음	규칙, 표준화
연계형 기술	연속적 상호의존성	중간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계획
집약적 기술	교호적 상호의존성	높음	부정기적 회의,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예정표

09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해설】**
- ① **[O]** 6급 이하는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5급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② **[O]** 소청심사는 인사상 불이익처분이 대상인데 비해, 고충처리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표시하는 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
  - ③ **[O]**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임용권자에게 결정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한다.
  - ④ **[X]**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 【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 전단, 제3조의2제6항 전단, 제3조의3제6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5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올바른 지문

-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10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③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 ④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해설】** ①, ③, ④ **【O】**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정책집행의 실패원인을 너무 많은 집행과정의 참여자, 집행관료의 빈번한 교체, 타당한 인과모형의 결여, 부적절한 기관의 정책집행 등으로 보았다.

② **【X】**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사례연구는 정책집행에 대한 초기 연구로 정책이 형성된 후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하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책결정과 집행사이에 연속성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280, 281

▶ ②

11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해설]**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이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는 **비독립단독형**이다.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집행부형)이다.

- ① [X]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는 것은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이다.
- ② [X] 합의체 구성원의 임명시기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계속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독립합의형**이다.
- ③ [X]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합의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O] **비독립단독형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되며, 인사기관장은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를 받는다.

**summary |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구분**

	합의성	합의형	단독형
독립성	독립형	독립합의형	독립단독형
	비독립형	비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483

## 1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② 민츠버그(Min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를 제시하였다.
-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④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해설】**
- ① **[O]** 하버드대 카플란&노턴(Kaplan&Norton)교수는 조직관리에 있어 전통적 재무의 관점 뿐 아니라 고객의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균형성과표(BSC)를 제시하였다.
  - ② **[O]** 민츠버그는 조직의 3가지 국면(구성, 조정기제, 상황·구조적 요인)에 따라 조직을 5가지, 즉 최고관리층, 중간계선, 작업계층, 기술구조, 지원참모(지원막료)를 제시하였다.
  - ③ **[X]** 허시와 블랜차드의 리더십 상황이론(생애주기이론)에서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때에는 부하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주는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④ **[O]** 베버는 권위의 유형에 따라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법규에 의한 지배, 계서제, 문서화,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관료의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 ▶ 올바른 지문

-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358, 374, 425, 455

▶ ③

| 개념 |

13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해설】** ① [O]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 스스로 주도하는 분권화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② [O]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는 지방분권화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X]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에 대한 대응이 요청되면서 중앙집권화가 확대된다.  
④ [O]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세계화 방향에 따라 지역은 상품 및 문화를 개발하여 개별주체로서 세계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817

▶ ③

14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 ②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 ③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 ④ 흐름과 변화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해설】** 모건은 조직을 이미지화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조직의 이미지들을 제시하였다.

② **【X】** 모건은 조직에 관한 여덟 가지 시각으로 기계장치로서의 조직, 유기체로서의 조직, 두뇌로서의 조직, 문화로서의 조직, 정치적 존재로서의 조직,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 흐름과 변화과정으로서 조직,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의 조직을 제시하였다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 X).

조직이미지	개념
기계장치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Machines)	조직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취급
유기체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Organisms)	조직을 하나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간주
두뇌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Brains)	두뇌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특성을 가진 조직
문화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Culture)	조직이 바로 조직문화 자체라고 보는 관점
정치적 존재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Political systems)	조직은 자신의 이해를 두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
심리적 감옥으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Prison metaphor)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그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심리적 감옥으로서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
흐름과 변화과정으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Flux & Transformation)	끊임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조직이 빠져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시각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조직 (Organization as Domination)	정치적 존재로서의 조직과 유사하지만, 권력의 행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관점

【참고】





15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가)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 년이다.

	(가)	(나)	(다)	(라)
①	10	3	10	1
②	5	3	10	3
③	5	5	20	1
④	10	5	20	3

**【해설】** (가) [5]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3]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10]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3] 예산과정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로, 우리나라의 예산주기는 3년이다.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① [O]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X]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의 처리】**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572, 573, 582, 585,586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설】 ① [O] 지방교부세법 제3조

**지방교부세법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② [X]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 ③ [X] 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조정해주는 재정조정제도를 말한다.
- ④ [X]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중앙에 대한 지방재정의 의존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지방교부세는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908~914



18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해설】 ① [×]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도 「전자정부법」에 적용을 받는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O] 전자정부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O] 전자정부법 제5조의3

**동법 제5조의3 【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④ [O] 전자정부법 제55조 제1항

**동법 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754~756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예산성과금은 수익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 【해설】** ① [X]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조세지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 ② [O]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4항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X]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성과금(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이내)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X]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조세지출은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③ 예산성과금은 수익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550, 640, 679, 680, 728



20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 ㄹ.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ㄱ [X] 사회실험은 어떤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연구설계 방식이다.  
 ㄴ [X] 진실험은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호손 효과, 대표성 부족 발생 등의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ㄱ.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 같이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summary | 실험 vs 비실험

		실험&통제집단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실행가능성	조사설계 유형
실험	진실험	동질성 확보 ○ (무작위 배정)	높음	낮음	낮음	무작위배정에 의한 실험 집단·통제집단 설계, 무작위배정에 의한 사전 및 사후 통제집단 설계
	준실험	동질성 확보 × (짜짓기 배정)	중간	중간	중간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 등
비실험		비교집단 ×	낮음	높음	높음	단일집단 사후측정, 단일 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310~312

